

대광여고 혁신학교 추진 '학부모 반발'

학교법인 흥복학원 산하 대광여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동문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광여고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심의가 최근 마무리돼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광여고는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 편중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능 수시 대비 교육 강화 교직원 업무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했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는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기자며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와 행정안전력 확

**광주·전남 경찰공무원
4년여동안 37명 사망**

광주와 전남지역 경찰이 범인 피습 등으로 4년여동안 37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지역 경찰공무원은 13명, 전남은 24명 숨졌다.

광주는 올해 8월까지 3명, 지난 해 5명, 2015년 1명, 2014년 3명이 사망했다.

전남은 각각 2명, 6명, 10명, 6명이 숨졌으며 이중 8명이 순직 처리됐고 광주는 3명이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어 공상처 리된 경찰공무원은 광주의 경우 370여명이며, 전남은 37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청이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 29명, 부산 20명, 경북·경기북부 19명, 전북·경남 18명, 충북 15명, 대구·인천 12명, 강원 11명, 충남 10명 등 총 298명이다.

경찰공무원 사망원인으로는 질병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 79명, 교통사고 19명, 안전사고 7명, 범인피습이 3명이다.

사망자 중 16.4%인 49명이 공무 중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며 83.6%인 249명은 공무 외 사망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업무특성 상 하루도 긴장을 놓추지 못하는 고도의 스트레스의 연속상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직·공상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무한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혁신학교 지정하면 학생들 공부 안한다”

학교 측 “수업혁신, 시설개선 위해 필요”

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흥복학원은 설립자 이홍하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된 후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장도 광주시교육청에서 과전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급식실과 운동장이 없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대광여고는 시설 개선과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동문들과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로 지정하면 학생들이

공부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

과 함께 지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항의하고 있다.

학교 측이 구성원들의 사전 의사 티진도 없이 일방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구성원 표결에서는 찬성 41명, 반대 40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 구성원과 동문,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양동숙 학교운영위원회는 “혁신

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

에서 운영위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 학교 지정에 찬성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다는 걸 나중에 파악했다”며 “학생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 사안인 민족 조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문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양식 대광여고 교장을 “주입식 수업에 폐쇄화 있는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혁신학교로 지정하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어느 교사가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겠냐”고 반박했다.

조인호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후보사퇴 촉구

지체장애인 단체 강력반발 “자격 미달” “전문성없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체장애인협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특정후보에 대해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체장애인협회는 A후보가 장애인고용사업장의 불법·부실운영으로 생산시설 지정취소 위기를 초래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의 이사장후보로서의 자격 조차 없다고

관의 이사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

지체장애인협회는 전남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집회를 열고 “수십명의 장애인을 실업자로 내보는 위기를 초래한 A후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직에 지원했다”며 “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의 이사장후보로서의 자격 조차 없다고

판단해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그간 운영해온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취소를 예고 받은 바 있다.

전남협회는 이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협회가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한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이를 범죄사실중 대부분은 전직 고용안정협회 조모 회장이 재임하던 13년 5월경부터 일어난 것으로 총 600여회에 걸쳐 11여억원의 부당계약을 하여 사업소장들이 사법처리 받았다는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사장 체용공고를 시작해 현재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한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영광=서희관 기자

‘철새 도래·AI항원 검출’ 전남도, 야생조류 차단방역 강화

전남도는 최근 국내 철새 유입이 늘고 서울과 경기, 전북지역 등 일부 철새 도래지에서 H5형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군에서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철새 도래지에 차단방역 흥보를 위해 현수막 69개와 입간판 50개를 설치했다.

또 시·군 전답공무원 1221명을 동원해 가금농가 대상 축사 그물망 정비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지도하고, 문자발송 등을 통해 차단방역 흥보를 강화하고 있다.

가금농장 및 가금도축장에서는 매일 가금 입장예찰을 실시하고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난 1일부터 도와 시·군에 27개소의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를 유지하고 있다.

발생위험 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 오리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귀가종용 식당주인 숨지게 한 50대 긴급체포

자신에게 귀기를 요구한 식당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서는 22일 식당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지사)로 이모(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께 보성군 A(67)씨 운영하는 식당 옆 사무실에서 주먹을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에게 얼굴과 턱을 맞은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식당 옆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 일행들에게 “담배를 피고 싶다. 라이터를 빌려주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놈이 대둔다”며 A씨의 친구에게 뺨을 한 대 맞은 이씨의 소란 행위가 이어지자 A씨 일행이 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담꾼인 이씨는 “손님들이 너 때문에 떠났다. 너도 귀가하라”는 A씨의 독촉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A씨 식당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직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이씨는 식당 주변 평상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택시기사 돈 빼앗고 상습 업무방해 5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정차 중인 택시에서 현금을 빼앗은 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편의점 등지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준강도·절도미수·업무방해 등)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종흥동 광주역사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1600원을 빼앗은 뒤 뒤따라온 운전기사를 밀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민족 상대로 관광버스에 탑승, 15분간 고성방가를 하며 운행을 방해한 뒤 오후 2시께 광주역사 주변 편의점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술을 가져가겠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역에서 노숙하는 A씨는 술값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냈다.

A씨는 범행 당일 업무방해 혐의로 험행범 체포돼 북부경찰서에서 2차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택시기사를 상대로 재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코올 증상이 있는 A씨가 광주역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40차례 가량 일관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역 주변으로 불리는 A씨는 평소에도 택시운전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풀을 뿐어먹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한 뒤 술값을 요구해왔다”며 “재벌 우여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술마시고 노상방뇨’ 경찰서장 처신 물의

지난 추석 연휴 때 현직 경찰서장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해남경찰서장 A씨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관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서장은 당일 점심 때 해남 군수대행 등과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식사를 하며 술 10여병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비용은 권한대행이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

식사를 마친 뒤 군수대행 일행과 헤어진 A 서장은 경찰 간부 2명과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인근 주차장 쪽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이를 보고 지적한 군민과 다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A 서장은 또 이날 직원을 통해 식사를 했던 식당에 전화를 걸어 돈봉투를 찾기도 했다.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A 서장이 노상방뇨 사실을 인정하자, 구두 경고 조치했다.

A 서장은 다만 “돈 봉투는 명절 때 부모님께 드리려고 쟁쟁놓은 것이었고 나중에 바지 뒷주머니에서 찾았다. 노상방뇨를 했지만 커피숍과 25m나 떨어진 주차장 끝 부분이었다. 술에 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다툴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